햇볕정책으로 냉전 종식…화해·협력 '물꼬'

2000년 6월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 김대중 대통령은 특별기에서 내려 환영나온 김정일 위원장과 뜨겁게 포옹했다. 반세기 동안 막혀있던 남북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극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두 정상은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다섯 개 항에 합의한 뒤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남북 간 교류의 활성화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을 열 것 등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 후 김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역사적인 6·15 선언 이후에도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 착공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추진 ▲국방장관 회담 ▲백두산 한라산 교차관광 ▲개성공단 착공 등을 성사시켰다.

지난 2000년 6월13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 공항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분단후 첫 남북정상회담 성사
한국인 첫 노벨 평화상 수상도
'6·15 선언'에 탄생한 개성공단
성공적인 남북경제협력 모델로

■ 민족통일과 DJ

◇**민족통일을 향한 집념**=사실 김 전 대통령의 일생은 통일을 향한 기나긴 여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냉전 수구세력으로부터 '빨갱이'로 몰리며 온갖 박해를 받았지만 평화통일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통일론을 완성해갔다.

김 전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3원칙 3단계 통일론으로 압축된다.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 원칙에 입각해 '남북연합→연방제→통일국가'의 단계를 거치는 통일방안이다. 김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통일론을 지난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첫선을 보였다.

남북연합은 남북이 서로 다른 정치·경제체제 및 정부를 유지한 채 협력기구를 구성,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일지향적 특수관계를 발전시키는 단계다. 경제부문에서는 직접교역 제도보장, 에너지·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협력, 북한 내 자원공동개발 등이 추진되며 국가보안법, 북한형법 및 노동당규약 등의 개폐문제도 마무리돼야 하다.

남북관계 기본법인 '남북연합헌장'이 제정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남북연합정상회의가 구성된다. 대의기구로 남북연합회의, 집행기구인 남북연합각료회의 등이 가동된다. 연합단계는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 형태지만 이 기간 중 '체제통합'이 달성돼야 연방제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

연방제 단계에서는 외교와 국방 및 주요내정을 관장하는 연방정부가 구성된다. 연합단계에서 곧바로 통일국가로 진입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달리 3단계 통일론은 ▲체제통합의 충격을 완화하고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감안, 지역자치 기간이 필요하며 ▲북한지역을 상당기간 특별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기성격의 연방제 단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방제에서는 남북합의로 연방헌법을 마련, 연방대통령과 연방의회를 구성하고 유엔에서 단일회원국으로 활동하며 세계 각국과의 외교도 단일화한다. 이 단계는 1민족,1국가,1체제,2자치정부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체제통합이 완성된다.

완전통일단계는 중앙집권제 또는 여러 개의 지역자치정부를 포함하는 미국·독일식 연방제를 상정하고 있다. 연방제하에서 한반도 전체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사회·문화적인 동질성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 완전통일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햇볕정책' 주창**=이 같은 통일론은 당시 냉전적 반공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대화를 역설한 것"이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그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용공음해 공작과 덧칠된 '색깔론'으로 이용되는 등 정치적 수난의 주요 원인이 됐다.

김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통일인식의 주요한 기반은 '선(先) 민주화, 후(後) 통일론'의 개념이다. 이는 그의 3단계 통일론의 주요 철학인 '3비론'(三非論) 즉 비폭력(非暴力)·비용공(非容共)·비반미(非反美)와 맞물려 3단계 통일론의 주요 배경이 됐다.

이 같은 3단계 통일론은 '햇볕정책' 즉 포용정책으로 구체화됐다. 햇볕정책이란 말은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했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하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그는 1997년 대통령 당선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히고 취임 직후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 통일 배제 ▲적극적인 화해·협력 추구 등의 대북 3원칙을 천명하면서 햇볕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했다. 특히 정경분리원칙을 통해 정치·군사적인 상황변화와 관계없이 민간교류가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 같은 대북정책의 변화는 정주영 전 현대명예회장의 '소떼 방북' 및 '금강산 관광선'출항 등의 상징적 사건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94년 핵위기 이후 크게 위축됐던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다.

지난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될 때까지 100만명이 넘는 남측 관광객이 금강산을 둘러봤다. 또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2000년 5월 말까지 1만 667명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는 1989년 방북 허용 이후 전체 방북 인원의 80.5%에 해당된다.

그러나 남북관계 순항을 위협하는 '악재'는 끊이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북잠수정 예인사건, 묵호 무장간첩시신의 발견, 남해안에서 반잠수정의 침투 및 총격전,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 등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98년 8월31일에는 북한이 '다단계 로켓'을 발사해 동북아 전체에 극도의 긴장이 조성됐으며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문제가 불거졌다.

때문에 당시 여론은 포용정책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전술적 수정을 거쳐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식견 있는 지도자로 평가하면서 북한 당국에 신뢰를 쌓았다. 또 2000년 3월 남북 간 협력 수준을 민간에서 정부로 진전시키겠다는 베를린 선언을 했다. 그리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큰 물꼬**=온 겨레의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을 넘어 화해와 통일을 향한 대장정의 출발이며 반세기가 넘는 상호 대립과 갈등의 분단 55년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나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 남북한 동시 입장을 성사시켰다. 이 남북 동시 입장은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서 무산되기 전까지 8년간 이어졌으며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에 북측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는 등 남북 체육교류가 활성화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는 그러나 임기 말에 새로 출범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정부와 대북관에서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대북정책을 놓고 마찰을 빚어야 했다.

또 퇴임 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전 현대가 4억달러, 정부가 1억달러를 북측에 몰래 건넨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이 뒤따르면서 그의 햇볕정책과 통일론은 빛이 바래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남북화해의 전도사와 파수꾼으로 활동했다. 남북관계가 고비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대북특사 1순위로 거론돼 노무현 정부 때 그의 재방북 문제가 남북 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도 했지만 결국 북한땅을 다시 밟지 못한 채 생을 마쳤다.

김 전 대통령은 올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연설에서 "북한이 극단적인 핵개발까지 끌고나간 것은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며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에 하루빨리 참가해서 또 미국과 교섭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통일의 꿈을 못다 이룬 채 영면했다.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만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